

1. 다음 중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회8급)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② 조례를 정할 때,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③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⑤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답) ①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핵심체크>> 조례와 규칙

구분	조례	규칙
제정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사무	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범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제정
벌칙	규정 가능	규정 못함

2.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회8급)

- ①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세항·목간에 금액을 상호융통하는 것이다.
- ② 예산의 이체는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 ③ 계속비는 세출예산 중 미지출액을 당해 연도를 넘겨 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되는 것을 말한다.
- 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편성하는 것이다.

(답) ③ 이월은 세출예산 중 미지출액을 당해 연도를 넘겨 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핵심체크>> 이월과 계속비

이 월	의의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일정액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
	종류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한 자금(한정성의 원칙 예외) • 사고이월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에 한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 한 자금(한정성·사전의결의 원칙 예외)
	재이월	명시이월은 1차에 한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지만, 사고이월의 재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특징	계속비나 예비비도 요건을 갖추 경우 이월가능하며, 추가경정예산도 이월할 수 있으나 이월된 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계속비	의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자금
	특징	• 지출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음 • 기재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관리	매년의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함
	체차이월	승인받은 계속비의 연부액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은 계속비 사업 완성연도까지 계속 해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장단점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가능하나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

3. 다음 중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 국회8급)

- ① 영국의 내각사무처는 비독립 단독형 인사기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 ②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③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은 준입법, 준사법 기능과 집행, 감사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 ④ 비독립 단독형 인사기관은 주요 인사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 ⑤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답) ②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은 여러 위원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핵심체크>>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기관

	독립합의형		비독립단독형	
장점	독립성	• 업관주의 압력 배제 • 행정부패와 무질서 방지 •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인사권자의 전횡 방지	비독립	• 행정수반의 강력한 정책추진 • 책임한계 명확 • 인사통제 용이
	집권성	• 실적주의 확립에 기여 • 인사행정의 통일성 확보 • 통합적인 조정 및 인사통제	분권성	• 적극적 인사행정 • 인사행정의 융통성
	합의성	• 인사행정의 신중성·공정성 확보 • 인사행정의 중립성 확보 • 인사행정의 계속성 확보	단독성	• 책임소재 명확 • 신속한 의사결정
단점	독립성	• 인사행정의 막료기능적 성격과 충돌 • 책임한계 불분명 및 인사통제 곤란 • 행정수반의 강력한 정책추진 곤란	비독립	• 인사행정의 정실화 우려 • 인사권자의 독선적·자의적 결정 •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곤란
	집권성	• 각 부처 기관장의 사기 저하 • 적극적 인사행정의 어려움 • 인사행정의 경직화	분권성	• 인사행정의 통일성 확보 곤란 • 통합적인 조정 곤란
	합의성	• 책임소재 불명확 • 신속한 결정의 어려움 • 타협적 의사결정 • 인사행정의 전문성 확보 곤란	단독성	• 인사행정의 신중성·중립성 저해 • 인사행정의 계속성·연속성 저해

4. 다음 중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 국회8급)

- ① 정부기관이 조사·검사·검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된 사무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다.
- ② 공공서비스 전달의 비용절감 및 품질개선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 ③ 정치적 관점에서는 관료제가 자기조직의 이익확대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 ④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수직적으로 추진되었다.
- ⑤ 면허방식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경쟁이 약할 경우 이용자 고객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답) ① 민간위탁은 정부기관이 조사·검사·검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의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다.

<<핵심체크>> 민간위탁의 기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④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5. 다음 중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드로(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서 메타정책결정 단계(meta-policy making stag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 국회8급)

- ①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 ② 정책결정체제의 설계·평가 및 재설계
- ③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 ④ 문제·가치 및 자원의 할당
- ⑤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답) ③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는 후정책결정단계에 해당한다.

<<핵심체크>> 드로(Dror)의 최적모형의 단계

초정책결정 (meta-policy making)	㉠ 가치 처리 → ㉡ 현실 처리 → ㉢ 문제 처리 → ㉣ 자원의 조사·처리·개발 → ㉤ 정책결정체제의 설계·평가·재설계 → ㉥ 문제·가치·자원 등의 할당 → ㉦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 메가정책(상위자원의 결정 - ㉠㉡㉢㉣)과 메타정책(㉤㉥)
정책결정(policy making)	㉦ 자원의 세부적 할당 → ㉧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들 간 우선순위의 결정 → ㉨ 주요가치를 설정하고 가치들 간 우선순위 결정 → ㉩ 좋은 대안을 포함한 주요 정책대안군의 마련 → ㉪ 각 대안들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예측 → ㉫ 최선의 대안의 발견 → ㉬ 최선의 대안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평가하고 이 대안이 좋은가 또는 나쁜가에 대한 결정
후정책결정 (post-policy making)	㉭ 정책의 집행에 대한 동기부여 → ㉮ 정책집행 → ㉯ 정책평가 → ㉰ 커뮤니케이션과 환류

6. 다음 중 국가의 재정지출을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 국회8급)

- ①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
- ②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기 어렵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다.
- ③ 조세를 통해 투자된 자본시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유재(free goods)로 인식돼 과다 수요 혹은 과다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
- ④ 과세의 대상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직적이다.
- ⑤ 미래 세대까지 혜택이 발생하는 자본투자를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할 경우 세대 간 비용·편익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답) ② 조세는 국민이 반대급부없이 납부한 자금이므로 국민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핵심체크>> 조세

의의	정부가 재정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원
장점	· 이자부담이 없어 부채관리와 관련된 재원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납세자인 국민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 · 장기적으로 차입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단점	· 세대 간 비용·편익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 조세를 통해 투자된 자본시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유재로 인식돼 과다 수요 또는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 과세의 대상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직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규모 재원투자가 필요한 전략 투자사업에서는 조세 재원 동원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

7.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 국회8급)

- ① 고위공무원단의 일부는 공모직위제도에 의해 충원된다.
 - ②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 ③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 ④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이며 별정직 공무원은 그 대상에 제외된다.
 - ⑤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무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 (답) ④ 고위공무원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이 높은 실·국장급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의 군을 대상으로 한다.

<<핵심체크>>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구성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이 높은 실·국장급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의 군
대상직위	-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부 각급 기관의 직위 중 실·국장급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되지 않음) -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상당하는 직위(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 포함
진입	일반직의 경우 후보자 교육(Action Learning) 이수와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고위공무원 후보자가 되며, 인사심사(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진임용
임용	경력경쟁채용(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승진임용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며 대통령이 함.
인사관리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어 범정부적 통합관리의 대상이 되며, 각 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인사권과 복무감독권을 행사
정원관리	계급(관리관, 이사관 등)이 폐지되고 직위의 직무 값에 따라 부여되는 직무등급 또는 직위에 의해 합리적인 보수지급과 인사관리가 이루어짐.
충원	각 소속 장관별 개방형 직위(20% 이내), 부처간 공모직위(30% 이내), 기관자율직위
보임기간	최소한 2년 이상 해당직위에 재직
근평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함. - 고위공무원은 5개 등급으로 평가하되, 부처별로 최상위등급의 인원비율을 20% 이내로 하고 하위 2개 등급(미흡 + 매우 미흡)의 인원비율을 10% 이상으로 해야 함.
보수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기본연봉[기준급과 직무급]과 성과연봉[성과급]의 결합)
검증	- 의의 : 고위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부진자의 퇴출을 강화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적격심사 실시 기관 :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 적격심사대상 : ㉠ 근평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 ㉢ 근평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 과정 :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적격심사의 대상 사유에 해당하면 인사혁신처장에게 적격심사를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는 대상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함(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 : 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과 자질의 평정에 따르되,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직권면직 가능). 다만,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정년 등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며, 정치적 중립 및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됨 - 다만, 가급 고위공무원은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8. 그라이너(Greiner)는 조직의 성장단계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는 양상이 다르다고 보았다. 다음 중 통제의 위기를 초래하는 단계는?(2016, 국회8급)

- ① 제1단계 - 창조의 단계
- ② 제2단계 - 지시의 단계
- ③ 제3단계 - 위임의 단계
- ④ 제4단계 - 조정의 단계
- ⑤ 제5단계 - 협력의 단계

(답) ③ 제3단계인 위임의 단계는 자율성의 위기를 사업단위별 권한위임을 통해 극복하는 단계로, 권한위임이 일선관리에 대한 통제를 상실케 하여 통제의 위기를 발생한다.

<<핵심체크>> 그라이너(Greiner)의 조직성장단계

제1단계(창조의 단계)	- 모든 일을 창업주가 수행하는 단계 - 창업주의 통솔범위의 한계로 리더십의 위기 야기
제2단계(지시의 단계)	- 리더십의 위기를 전문경영인을 두어 극복하는 단계 - 전문경영인의 지나친 지시와 감독에 의한 자율성(상실)의 위기 야기
제3단계(위임의 단계)	- 자율성의 위기를 사업단위별 권한위임을 통해 극복하는 단계 - 권한위임이 일선관리에 대한 통제를 상실케 하여 통제의 위기 야기
제4단계(조정 단계)	- 통제의 위기를 기능별 분할통제장치들을 통해 극복하는 단계 - 분할통제장치들은 집행부서의 활동을 묶는 문서주의를 야기함으로써 관료주의의 위기 야기
제5단계(협력의 단계)	- 관료주의의 위기를 구성원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유연한 조직관리(팀제 등)로 극복하는 단계 - 구성원들을 팀워크와 창조적 쇄신에 대한 강한 압력에 지치게 하여 탈진의 위기 야기

9. 다음 <사례>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6, 국회8급)

정부가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해 무주택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청약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더니, 주택을 구입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 청약권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세를 살면서 자발적 무주택자가 되었다.

- ① 불완전 경쟁(imperfect competition)
- ②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y)
- ③ 역선택(adverse selection)
- ④ 적응적 흡수(co-optation)
- ⑤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답) ② 설문은 정부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파생적 외부효과의 예이다.

10.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 국회8급)

-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②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 ③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

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④ 주민투표제도는 지역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들 중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안들에 대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중 일정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 등을 소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답) ④ 주민투표제도는 지역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들 중 조례로 정한 사안들에 대해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핵심체크>> 주민투표제도

의의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임의적 제도).
	주민투표법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발의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투표청구권자	- 주민 :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단체장에게 청구 - 지방의회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단체장에게 청구 - 자치단체의 장 : 단체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주민투표 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 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반드시 투표에 부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결과에 대한 구속력도 없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징역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확정	- 주민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 -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함	
투표결과처리	- 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주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은 2년 이내에는 주민투표로도 변경 불가능	
불복	- 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소청할 수 있고, 소청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는 고등법원에, 광역자치단체는 대법원에 소송제기 가능 - 주민투표에 대하여 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	

11. 다음 중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 국회8급)

- ① 수입대체경비
- ②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 ③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 ④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⑤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답) ①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인 긴급배정은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한다. 수입대체경비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핵심체크>> 수입대체경비와 긴급배정

수입 대체경비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해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할 수 있는 경비(국고통일주의·통일성의 원칙의 예외)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

12.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 국회8급)

-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하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 안에서 그 회계연도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③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답) ②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하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계속비라 한다. 계속비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위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핵심체크>> 계속비

계속비	의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자금
	특징	- 지출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음 - 기재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관리	매년의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함
	체차 이월	승인받은 계속비의 연부액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은 계속비 사업 완성연도까지 계속해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장단 점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가능하나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

13. 다음 정책집행 수단으로서 바우처(voucher)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 국회8급)

- ① 주민 대응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 ②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급주체를 활용한다.
- ③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 ④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 ⑤ 민간부문을 활용하지만 여전히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답) ③ 바우처(voucher)제도는 특정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구입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있다.

<<핵심체크>> 바우처(voucher)제도

의 의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서비스 공급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 또는 카드를 제공하는 방식
성 격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의 중간적 성격
유 형	• 수혜방식에 따른 구분 - 명시적 바우처, 묵시적 바우처, 환급형 바우처 • 지불형태에 따른 구분 - 종이 바우처, 전자 바우처
적 용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에 활용(고용노동부의 교육훈련카드, 교육부의 무상보육·교육 프로그램, 방과 후 수업, 국토교통부의 주택장기임대사업 등)
계약방식과 비교	• 공공서비스 전달 경로 : 바우처는 서비스 수혜자에게 카드나 상품권을 제공하지만, 계약방식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에게 자금이 제공됨 • 경쟁 확보 방안 : 바우처는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를 통해 생산자 간 경쟁을 유도하지만, 계약방식은 정부의 선택권 행사를 통해 생산자 간 경쟁을 유도함
장 점	• 서비스 수혜자에게 선택권 보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생산자 간의 경쟁 유도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 형평성 확보를 위해 취약계층을 보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통한 지대추구와 포획현상 등 부패 방지 • 생산자 감시 및 통제를 위한 행정관리비용(거래비용) 경감 • 진보주의(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보수주의(가치제에 대한 시장 형성 및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모두의지지 획득
단 점	• 서비스 수혜자의 서비스 누출 가능성(암시장 형성 - 바우처 전매) • 서비스 수혜자가 생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역선택 현상 야기 • 생산자가 이윤이 많이 남는 소비자에게만 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크리밍 현상) • 바우처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14. 다음 중 우리나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 국회8급)

- ① 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 심의회를 둔다.
- ② 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전보, 개인별 상여금 차등 지급 등이 가능하다.
- ④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 ⑤ 기관장은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임명한다.

(답) ⑤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핵심체크>>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설치	설치기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또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설치근거	대통령령	
	설치권자	행자부장관이 기재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 또는 해제	
중기관리 계획	행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인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운영원칙	책임운영기관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됨		
유형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신분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신분(현재 특허청장은 정무직 공무원) - 임기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임기제 공무원(경력직 공무원은 응모 불가) 5년 이내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2년 이상으로 함
정원관리	총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함(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함)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 기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외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짐 -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짐(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
예산 및 회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규정을 준용함 - 초과수입금을 직·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은 특별회계로, 그 외 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 -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재부장관이 통합관리하며, 정부기업에 산법이 적용됨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초과수입금을 직·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음
성과관리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국무총리와 성과계약을 체결함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함
평가	기관장 소속하에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두고, 행자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둠(운영위원회의 평가가 우선함).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두고, 행자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둠(운영위원회의 평가가 우선함).

15. 다음 중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 국회 8급)

- ①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을 비판한 모형이다.
- ②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기관의 통제하는 전체 예산액 중 일부분에만 관련된다.
- ③ 고위직 관료는 금전적 편익보다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환경에서 오는 효용을 증진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을 갖는다.
- ④ 합리적 관료들은 소규모의 엘리트 중심적이고, 정치권력의 중심에 접근해 있는 부서에서 참모기능수행을 원한다.
- ⑤ 통제기관의 경우 예산이 증가할수록 권력이 커지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답) ⑤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은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을 비판한 모형으로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동기는 예산의 유형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료들은 핵심예산(기관자체의 운영비) 및 관청예산(해당기관이 민간부문에 지출하는 예산)의 증대로는 이익을 얻지만 사업예산(해당 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에게 이전하는 예산)의 증대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므로 무조건적인 예산극대화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핵심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규제·거래·조세·봉사기관과는 달리 사업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제기관은 예산이 확대되어도 자신들의 이익이 증진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극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핵심체크>> 관청형성모형의 예산극대화 동기에 대한 반론

예산유형에 따른 변이	관료들은 핵심예산(기관자체의 운영비) 및 관청예산(해당기관이 민간부문에 지출하는 예산)의 증대로는 이익을 얻지만 사업예산(해당 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에게 이전하는 예산)의 증대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므로 무조건적인 예산극대화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기관유형에 따른 변이	핵심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규제·거래·조세·봉사기관과는 달리 사업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제기관은 예산이 확대되어도 자신들의 이익이 증진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극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시간의 전개에 따른 변이	지나치게 팽창된 조직은 그 기능의 일부를 타 부서에게 넘겨줄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서의 팽창을 가져올 사업예산의 증대를 추구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 국회8급)

-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②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④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답) ④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직장 이탈금지의무).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가공무원법 제58조).

17. 다음 중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각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 국회8급)

- ① 서울지방경찰청
- ② 부산지방우정청
- ③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④ 부산지방중소기업청
- ⑤ 충청지방통계청

(답) ③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행정각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오답정리>>

- ① 서울지방경찰청 - 행정자치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 ② 부산지방우정청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 ④ 중소기업청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 ⑤ 통계청 - 기획재정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18. 다음 중 스마트사회의 전자정부에서 강조되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 국회8급)

- ① 시민집단수요 중심의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 ② 모바일 기술에 의해 현장근무,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가 촉진된다.
- ③ 국민들이 민원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국민의 요구들을 미리 파악해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 ④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사고 등에 대해 사전예방 위주의 위기관리를 강화한다.
- ⑤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방식으로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답) ① 스마트 사회의 전자정부는 시민개인수요 중심의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19.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2016, 국회8급)

- ㄱ. 갈등은 조직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방안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 ㄴ. 갈등관리 방안 중 협동(collaboration)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 ㄷ.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크다.
- ㄹ. 갈등해소를 위한 경쟁(competition)전략은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나 구성원들에게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
- ㅁ. 조직이 무사안일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타협(compromise)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 ① ㄱ, ㅁ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ㅁ
- ⑤ ㄷ, ㄹ, ㅁ

(답) ④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아 특정인이 타구성원과 협력이 필요할수록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크다(ㄷ). 경쟁(competition)전략은 양당사자 모두 다른 당사자를 희생시키고 자신의 목표만을 달성하려는 단정적·비협력적 방식으로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나 구성원들에게 인기 없는 조치를 실행할 경우 사용될 수 있다(ㄹ).

<<오답정리>>

- ㄱ. 갈등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존재하므로 적절한 방안을 통해 갈등을 최적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ㄴ. 갈등관리 방안 중 타협(compromise)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분명한 승자나 패자가 없다.
- ㄹ. 조직이 무사안일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핵심체크>> 갈등관리 전략

예 방 및 해 소 전 략	① 분업구조로 인한 갈등 : 전문교육보다 직급교육 강화, 공동교육훈련, 인사교류 등 ②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갈등 : 더 많은 자원의 확보, 자원배분기준의 명확화 등 ③ 업무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갈등 : 부서 간의 접촉 필요성 완화 ④ 개인적 특성에 의한 갈등 : 역할연기·감수성 훈련 등의 교육훈련 ⑤ 관할 영역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 : 업무수행의 구체적 목표·절차·규칙 등의 정형화(표준운영절차의 마련) ⑥ 기타 : 계층제에 의한 명령과 강제, 갈등 부서 간 통폐합, 공동의 적 설정, 상위목표의 설정(목표의 차별화를 통한 우선순위 설정), 상호작용 촉진, 문제의 공동해결, 고충해결장치의 마련, 평가기준과 보상시스템의 명확화 등 ⑦ 사이먼(Simon)과 마치(March) : 문제해결, 설득, 협상, 정략 ⑧ 토마스(Thomas) : 회피, 순응, 경쟁, 타협, 협동
조 성 전 략	① 외부인의 영입(개방형임용제), ② 경쟁의 조장(성과급제, 현장마크제 등), ③ 불확실성의 제고(기존의 관행에 변화를 주거나 위기감 조성), ④ 정보 및 권력의 재분배(인사이동 또는 직위 간 관계의 재설정), ⑤ 수평적 분화의 촉진, ⑥ 정보조절(정보전달통로의 변경) 등

20. 다음 중 아른슈타인(Arnstein)이 제시한 주민참여의 8단계론 중 명목적(형식적) 참여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2016, 국회8급)

- ① 조작(manipulation)
 ② 치료(therapy)
 ③ 협력(partnership)
 ④ 정보제공(informing)
 ⑤ 주민통제(citizen control)

(답) ④ 조작(①)과 치료(②)는 비참여의 단계, 정보제공(④)은 형식적 참여의 단계, 협력(③)과 주민통제(⑤)는 실질적 참여의 단계에 해당한다.

<<핵심체크>> 아른슈타인(Arnstein) 주민참여의 8단계론

참여단계	참여 내용	참여 형태
주민통제	주민들이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및 평가 단계까지 완전히 통제하는 완전한 자치가 이루어지는 단계	주민권력의 단계 (실질적 참여)
권한위임	주민이 정책과정에 우월한 권력을 가지고 참여하며, 행정기관은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을 협상의 장으로 유도하는 수준에 그치는 단계	
공동 협력	행정기관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이 행정기관에 맞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단계	
회유 (설득)	주민이 정보를 제공받고 각종 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하나 실질적으로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단계	명목적 참여의 단계 (형식적 참여)
자문 (상담)	행정기관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나 결정권은 여전히 행정기관이 소유하는 단계	
정보제공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양방향적 의사소통이나 협상 불허)	
치료 (교정)	행정기관이 주민의 욕구불만을 분출시켜 일방적인 지도를 통해 주민들의 태도나 행태를 교정하는 단계	비참여의 단계
조작 (제도)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활동에 관심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접촉하여 설득·계도·지시하는 단계	

21. 다음 중 점증주의적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 국회8급)

- ① 점증주의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의 실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 ②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다원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을 정교하게 결합시켰다.
- ③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여, 정책결정과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 ④ 상황이 복잡하여 정책대안의 결과가 극히 불확실할 때, 지속적인 수정과 보안을 통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
- ⑤ 비가분적(indivisible) 정책의 결정에 적용하기 용이한 모형이다.

(답) ⑤ 분할이 불가능한 비가분적(indivisible) 정책결정은 총체적 결정의 특징을 지닌 합리모형이 보다 적합하다. 점증모형은 분할적 정책결정에 보다 적합하다.

<<핵심체크>>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합리모형	점증모형
목표달성도에 초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제거에 초점
• 전체적 최적화 추구(비분할적·포괄적 결정, 근본적 결정, 조직 간 장벽 제거, 사업별 예산 편성)	• 부분적 최적화 추구(분할적·편린적 결정, 지엽적 결정, 조직 간 구분 인정, 조직별 예산편성)
• 목표수단분석 실시 • 목표·수단의 연쇄 관계 불인정(이론 있음)	• 목표수단분석 미 실시 • 목표·수단의 연쇄 관계 인정(이론 있음)
쇄신적·근본적 변화(기득권·매몰비용 불고려)	점진적·한계적 변화(매몰비용·기득권 인정)
하향적 결정(소수에 의한 폐쇄적 결정)	상향적 결정(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연역적 접근(이론적 근거 있음)	귀납적 접근(이론적 근거 결여)
경제적 합리성 추구	정치적 합리성 추구
단발적 결정 : 문제의 재정의 없음	연속적 결정 : 문제의 재정의 빈번
모든 관련 요소에 대한 포괄적 분석	제한된 비교 분석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 수단선택에 초점	이해당사자간의 대화·토론에 초점
권위주의 체제, 개발도상국 적용에 용이	민주주의 체제, 선진국 적용에 용이
폐쇄체제에 입각	개방체제에 입각
•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불안정적인 사회에 적용(환경변화에 대응 용이) • 예측가능성이 큰 확실한 상황에 적용(불확실성에 대응 곤란)	•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안정적 사회에 적용(환경변화에 대응 곤란) • 다양한 이해관계의 반영으로 예측가능성이 낮은 상황에 적용(불확실성에 대응 용이)
• 정책문제의 상호연관성이 낮을 때(최적화 추구) • 정책의 분할가능성이 낮을 때(전체적 최적화)	• 정책문제의 상호연관성이 높을 때(만족화 추구) • 정책의 분할가능성이 높을 때(부분적 최적화)

22. 다음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은?(2016, 국회8급)

- ① 한국가스안전공사
-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④ 한국고용정보원
- ⑤ 국민연금공단

(답) 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핵심체크>> 공공기관의 구분

공기업	의의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시장성이 강한 기관)		
	유형	시장형	개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총수입액의 85%)이상인 공기업
			예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14개
		준시장형	개념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예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16개
준정부기관	의의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공공성이 강한 기관)		
	유형	기금관리형	개념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16개)
			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위탁집행형	개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74개)
			예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지정(203개)		

23. 다음 중 민간투자 방식인 BTO와 BTL의 상대적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 국회8급)

- ① BTO는 민간의 수요위험을 배제한다.
- ② BTO의 사업운영주체는 민간사업시행자이다.
- ③ BTL에서는 정부의 시설임대료를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한다.
- ④ BTL은 최종수요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⑤ BTO에서는 예상수입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답) ① BTO는 민간이 수요부족 위험부담을 진다.

<<핵심체크>> BTO와 BTL의 비교

	BTO(수익형 민자유치)	BTL(임대형 민자유치)
대상시설 성격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도 가능
서비스 제공	민간사업자(이용자는 민간사업자에게 이용요금 납부)	정부(이용자는 정부에게 이용요금 납부)
투자비 회수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 임대료
사업 리스크	민간사업자가 수요 부족 위험 부담을 짐	민간사업자가 수요 부족 위험 부담을 지지 않음
목표 수익률 실현 방법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보장 - 적자보전협약에 의하여 최소운영수익보장	사전적으로 목표수익률 실현 보장 - 정부가 적정 수익률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산정·지급

24. 다음 중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 국회8급)

- ① 대통령
-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 ③ 서울대학교 총장
- ④ 세종특별자치시장
-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의원

(답) ③ 서울대학교는 현재 국립대학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사립학교법에 준용되어 서울대학교총장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5.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 국회8급)

- 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 조직 내의 내부통제를 약화시킨다.
- ③ 대표관료제는 사회경제적 인구구성을 반영토록 하여 해당 관료가 출신집단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 ⑤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평성을 지향한다.

(답)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 조직 내의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핵심체크>> 대표관료제

의의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인종·종교·성별·직업·신분·계층·지역 등)으로부터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여 정부 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
배경	행정국가화 현상(관료의 자원배분권 확대)
전개	킹슬리(대표관료제 처음 제시), 크랜즈(비례대표관료제 제시), 모셔(적극적 대표성과 소극적 대표성을 구분하고 관료들의 상징적 측면 강조)
대표성의 의미	• 소극적·수동적·피동적·구성론적 대표성(상징적 측면; standing for) :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의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는 것 • 적극적·능동적·역할론적 대표성(행동적 측면; acting for) : 관료들이 자신들의 출신집단을 대변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출신집단에 책임을 지는 것 • 관계 :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자동적으로 적극적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의 관계는 현실에서 명확하게 검증되지 못했으며 허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음
장점	① 실질적 기회균등(적극적·진보적 평등), ② 관료제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 ③ 행정의 대응성 증진, ④ 사회적 형평성 제고, ⑤ 행정의 신뢰성 증진, ⑥ 행정의 책임성 제고(민중통제를 관료제에 내재화), ⑦ 주관적(심리적) 책임의 적정화를 통한 공정성 증진, ⑧ 다양성 관리기법 발전, ⑨ 실적주의의 폐단 시정, ⑩ 합리적 정책결정 등
단점	① 역차별과 사회적 분열 조장, ② 집단이기주의의 발현, ③ 공직취임 후의 재사회화 불고려, ④ 대표성 확보의 기술적 어려움, ⑤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 저하, ⑥ 시민통제의 무력화, ⑦ 감축관리와 충돌, ⑧ 자유주의 원리와 충돌 등